


경제관계장관회의
24-19-1
(공개)

 역동경제로
서민·중산층 시대 구현!

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

2024. 10. 2.

관 계 부 처 합 동

요 약

「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」 주요내용

1. 내수경기 점검

❖ 경기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'23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회복 흐름. 내수는 아직 상대적으로 회복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

* 경기 상승흐름 GDP순환변동치(기준=100): ('23.上)99.5 ('23.下)99.8 ('24.上)100.1

** '24.上 10대 수출국 중 수출증가율 1위(WTO. %) → (韓)9.1 (中)3.8 (美)2.3 (獨)△1.5 (日)△3.6

① [투자] 상반기 부진했으나, 하반기 들어 점차 회복

* 설비투자(전기비, %): ('24.1Q)△3.8 (2Q)△0.2 [(4)1.6 (5)△3.6 (6)3.5] (7~8)8.4

* 설비투자 전망(%,'24.上→下): (KDI^{8월})△1.8→3.1 (한은^{8월})△1.8→2.6

○ 수출·기업실적 개선으로 투자여력이 제고되며 회복세 확대 예상, 본격적인 회복 위해 중소·벤처 맞춤형 보완 등 정책노력 필요

* 기업 매출액(전년동기비, %): ('23.1Q)0.4 (2Q)△4.3 (3Q)△5.2 (4Q)△1.3 ('24.1Q)1.2 (2Q)5.3

⇒ 규제개선, 현장애로 해소 등을 통한 투자실행 촉진과 중소·벤처기업 등 투자여력 보강을 통한 회복 가속화에 주력

② [건설] 1분기 예상보다 선방했으나, 2분기 이후 감소세

* 건설기성(전기비, %): ('24.1Q)4.9 (2Q)△6.2 [(4)4.9 (5)△4.6 (6)△1.5] (7~8)△3.9

○ 작년 수주부진 영향 지속으로 당분간 어려움이 전망되며, 공사비 이슈 등에 따른 공사지연, 지방 미분양 등 하방요인

* 건설수주(전년비, %): ('22.下)3.0 ('23.上)△23.3 (下)△13.6 ('24.上)2.9 (7~8)27.3

⇒ 공공투자 확대, 공사비 등 민간애로 해소, 미분양 축소 등 지역건설 경기 활력제고를 통해 건설부진 적극 보완

③ [소비] 최근 서비스부터 회복 조짐이나, 재화는 회복 속도차

* 서비스업 생산(전기비, %): ('24.1Q)0.8 (2Q)△0.3 [(4)0.8 (5)△0.8 (6)0.3] (7~8)0.3 <3개월 연속 증가>

소매판매(전기비, %): ('24.1Q)△0.5 (2Q)△0.8 [(4)△0.6 (5)△0.2 (6)0.9] (7~8)△0.6

○ **고물가·고금리 완화, 소득·임금 증가 등에 힘입어 점차 개선 전망**

- * 소비자물가(전년동기비, %): ('23.1Q)4.6 (2Q)3.3 (3Q)3.1 (4Q)3.4 ('24.1Q)3.0 (2Q)2.7 <8월 2.0%>
- * 실질임금(전년동기비, %): ('22.2Q)△1.1... ('24.1Q)△1.7 (2Q)**0.9**<9분기 만에 증가> (7)**4.8**<역대 7월 최대>
- * 민간소비 전망(%,'24.上→下): (KDI^{8월})1.0→**2.0** (한은^{8월})1.0→**1.8**

○ **다만, 구조적 요인이 부문별 회복강도 제약**

- * 지방인구 유출·고령화, 고령층 소비성향 하락 → 지방소비 회복 제약
온라인화 가속, 코로나 기간 부채누적 → 소상공인 어려움
코로나 당시 내구재 소비 급증 → 교체주기 도래 시까지 내구재 소비 회복 지연

⇒ **민간소비의 구조적 취약부문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추진**

2. 대응 방향

① **[투자]** 투자여력 ^高 **실행촉진** + 투자여력 ^低 **지원 확대** → **회복 가속화**

① **총 107조원** 규모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연내 착수 등 지원

- ① **하반기 62조원** 규모 10대 제조업 설비투자계획 실행 관리
- ② **1·2차 투자대책 중 24.4조원**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**4분기 내 착공**(0.8조원 규모)하거나 **착공 前 절차***를 완료
- * 기업 입주 허용을 위한 산단 관리 기본계획 변경,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
- ③ **최대 20.6조원** 규모 62개 프로젝트의 분쟁 조정을 4분기 내 완료

② **중소·벤처 투자여력 보강을 위해 부담경감·자금지원 확대**

- **중소·중견 임투공제***를 **'25년말까지 연장** ^{조특법 개정}
중소·중견 전용 정책금융 규모를 +16.8조원 확대 집행
- * 투자 증가분 공제율 상향은 항구화 + 중소·중견 임투세액공제는 1년 추가 연장(~'25)
- **2억불 글로벌 벤처투자 모펀드 설립, 공모형 벤처투자 도입 등**
국내외 투자 참여자 확충 및 지역투자 전용 벤처펀드 확대(**'25~'27, 1조원**)

※ **범부처 투자지원체계* 가동**하여 투자활성화 적극 지원

- * ①투자활성화 장관회의 창설 → 분야별 투자활성화과제 지속 마련
- ②부총리, 관계부처 장관 합동 업계간담회 → 투자독려·소통강화 추진
- ③확대 투자 익스프레스(차관급) 10월 키프 → 핵심프로젝트 현장방문 & 애로해소
- ④규제투자어로 접수센터(대한상의) 등 → 기업투자 밀착지원

☞ 11월중 기업규모별·신산업 규제 합리화 및 경제형별 정비 + **3차 투자활성화 대책** 발표

2 **[건설] 공공투자 확대 + 공사비 안정화 + 지방미분양 해소 → 적극 보강**

① 수주부진 하방압력을 **공공8조원 + 민투30조원** 추가투자로 보완

- 既발표된 **하반기 공공기관 +7조원** 추가투자에 **+1조원** 보강
- **신축매입임대 11만호^{'24~'25} 조기공급** 지원, **공공주택 25.2만호^{'25} 공급**
- **공사비 특례 및 24조원 금융지원 패키지*** 마련, 다양한 방식의 **민자사업 활성화****를 통해 **민간투자 5년간30조원** 확대 추진

* 사업당 보증한도 2배 확대(1→2조원), 민자사업 출자 전용 인프라펀드 신설(0.2조원+α) 등

** 민자사업으로 '운영 중인 노후·혼잡 인프라 개량·증설 허용, '신규 사업시설 발굴 패스트트랙 신설 등

② 공사비 안정화, PF정상화 지원 등 핵심 민간애로 해소

- **“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*” 가동** → **‘25~‘26년간 공사비 상승률**을 최근 3년 평균(8.5%)보다 현저히 낮은 **2% 내외**로 관리

* ①주요자재 수급·가격 안정화, ②인력수급 안정화, ③관급자재 조달방식 개선 등

- **총 100조원*** 유동성 패키지를 통해 PF 등 시장 안정화

* PF보증(HUG·HF) 35조원,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(HUG) 5조원, 非주택 보증(건설공제조합) 4조원 등

③ 지역건설 위축 주요인인 **미분양 해소**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

- 지방 미분양 주택의 ①**임대 활용**, ②**매입·보유 부담 완화***를 위한 **각종 세제·금융지원 등 강화**

*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기간 확대(5→7년) 등

③ [소비] 부문별 구조적 요인에 대한 맞춤형 대응 → 소비여력 확대 촉진

① (지역) 각종 정책을 지방중심 전환하여 소비기반 확충

- 전국단위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우대토록 재설계 추진
- 가을 계기 여행·숙박 등 최대 58만명 할인혜택 집중 제공
- 전통시장 및 추가소비 공제 상향 등 소비 촉진과 생활인구 확충* 노력 지속

* 세컨드홈 활성화(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신규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),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 등

② (취약계층) ①저소득층 → 현금성 지원 +4조원 확대,

②소상공인 → 25조원 규모 경영여건별 맞춤형 종합지원 추진

-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* 및 햇살론유스 지원대상** 확대,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신설 등 서민층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

* [기존] 실직·폐업 등 사유시 최대1년 상환유예 → [추가] 일시적 애로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

** [기존] 저소득 대학생·미취업·사회초년생 → [추가] 청년 개인사업자

- 위메프 피해지원 대상을 알렛츠 피해기업까지 확대하고 임금체불액 지급 및 체불피해자 대상 대지급금 지급
- 온누리상품권은 동행축제 등 소비촉진행사를 계기로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골목형상점가 등 사용처 확대 병행
- 농어민 지원을 위해 청탁금지법령 상 농수산물 가액범위를 상시 30만원으로 규정(15 → 30만원)

③ (내구재) “4+1 자동차 구매지원 패키지*” 추진

* [기존] ①전기차보조금 전기화물차 확대 ②노후차 개소세 감면 ③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연장(~26)

④취득세 감면 다자녀 기준 완화(3→2자녀) → [추가] 다자녀가구 전기차 보조금 확대(11월~)

④ (물가) 공급 확대 등 먹거리 가격안정에 총력

- 배추 1만톤 이상 추가 공급, 배추·무·당근·수입과일 전품목 (10종) 할당관세 연말까지 연장

본 판

순 서

I . 최근 내수경기 점검	1
II . 대응방향	5
III . 세부 추진과제	6
1. 투자 회복 가속화	6
2. 건설부문 적극 보강	9
3. 민간소비 맞춤형 지원	13

I. 최근 내수경기 점검

❖ 최근 경기상황: 수출 중심 회복세, 내수는 아직 회복속도 완만

- 경기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'23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회복 흐름 → 작년 4분기부터 잠재수준(2%) 이상의 성장률 기록

* GDP 순환변동치(기준=100, 분기평균): ('23.上)99.5 (下)99.8 ('24.上)**100.1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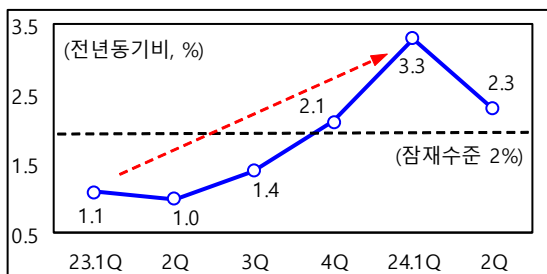
- 수출은 글로벌 교역·반도체 업황 호전 등으로 호조를 보이며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당초 전망을 큰 폭 상회할 전망

* '24.上 10대 수출국 중 수출증가율 1위(WTO. %) → (韓)**9.1** (中)3.8 (美)2.3 (獨)△1.5 (日)△3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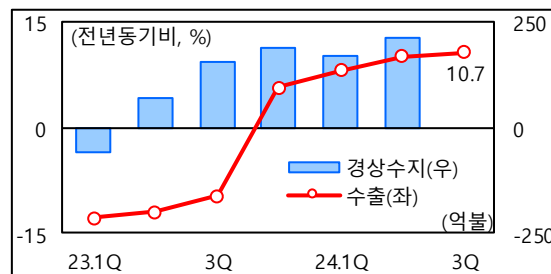
* '24년 수출 전망(% 통관기준): (하경정^{7월}) 9.0 (KDI^{8월}) **9.5**<상품수출> (한국은행^{8월}) **9.1** / (실적^{1~9월}) **9.6**

'24년 경상수지 전망(억불, '24.5→8월): (정부^{7월})630 (KDI)703→**770** (한국은행)600→**730**

경제성장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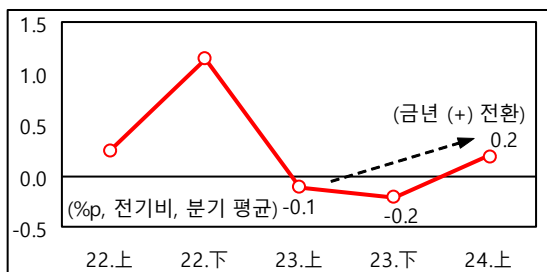
수출 및 경상수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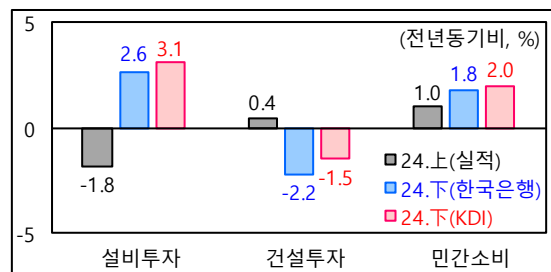
-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나, 물가 안정화, 수출호조 파급 등으로 저점을 지나 점차 올라오는 모습

- 향후에도 고물가·고금리 완화, 기업실적·가계소득 증가 등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. 다만, 부문별로는 회복속도에 다소 차이

내수 성장기여도



하반기 내수 부문별 전망('24.8월)



⇒ 내수 부문별 진단을 통해 회복력 제고를 위한 과제와 대응방향 검토

1. 설비투자

□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세 확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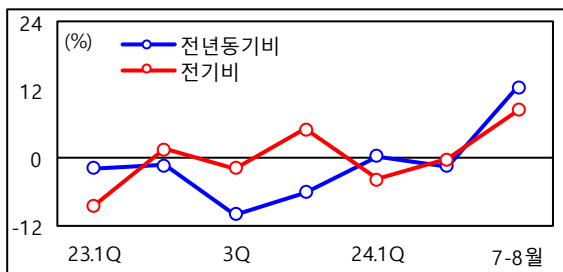
- 설비투자는 상반기 중 운송장비 감소 영향으로 부진했으나, 하반기 들어 회복 가시화

* 설비투자(전기비, %): ('24.1Q)△3.8 (2Q)△0.2 [(4)1.6 (5)△3.6 (6)3.5] (7~8)8.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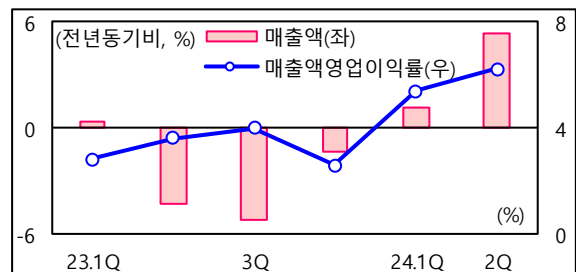
- 수출실적 호조가 기업이익으로 반영되며 투자여력이 늘고, 상반기 이연물량이 하반기 도입되며 회복세 확대 예상

* 설비투자 전망(전년동기비, %): ('23.下)△2.0 ('24.上)△1.8 → ('24.下^예) <한은>2.6 <KDI>3.1

설비투자(산업활동동향)



기업 매출액 및 매출액영업이익률



□ 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한 회복속도 가속화가 관건

- 최근 개선 흐름을 본격적인 투자 회복으로 이어가기 위해 기업의 투자실행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노력 강화 필요

* 투자 저해요인(한경협, '24.7월, 주요 대기업 대상): 고금리(28%), 고환율(21%), 경제 불확실성(16%)
↳ 투자 활성화 필요과제: 규제완화(25%), 세제지원(23%), 물가안정(13%)

- 특히, 대기업에 비해 투자여력이 제한된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해 맞춤형 보완방안 병행 필요

* 금년 중소기업 대출수요는 증가했으나,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향은 하락
↳ 중소기업 대출수요/은행 대출태도(기준=0, 한은): ('23.下)12/△3 ('24.上)25/2 (3Q^예)22/△11

⇒ **규제개선, 현장애로 해소 등 투자실행 촉진과 중소·벤처기업 등 투자여력 보강을 통한 회복 가속화에 주력**

2. 건설투자

□ 예상 대비 선방했으나, 수주부진 현실화로 어려움 예상

- 건설투자는 올해 1분기 대형 사업장 마무리 공사 집중 등으로 예상보다 선방했으나, 2분기 이후 감소세

* 건설기성(전기비, %): ('24.1Q)4.9 (2Q)△6.2 [(4)4.9 (5)△4.6 (6)△1.5] (7~8)△3.9

- '23년 수주부진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며 당분간 어려움 예상

* 건설수주(전년동기비, %): ('22.下)3.0 ('23.上)△23.3 (下)△13.6<4~6분기後 영향> ('24.上)2.9 (7~8)27.3

□ 건설투자 하방요인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

- 민간부문의 건설수요 보완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 필요

* 건설수주(전년동기비, %, '23.上→下→'24.上)

: (전체)△23.3→△13.6→2.9 (민간)△30.1→△27.3→△2.7 (공공)3.2→33.3→32.0

- 공사비 상승 등 기 추진중인 공사의 중단·지연요인도 해소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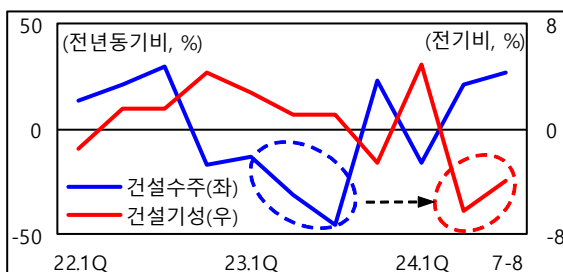
* 건설공사비 지수(건설산업연구원): ('20)100 ('21)116.8 ('22)125.6 ('23)129.1 ('24.7)130.1

- 지방 건설업체 재무여건 및 건설공사 수행역량을 저해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 해소가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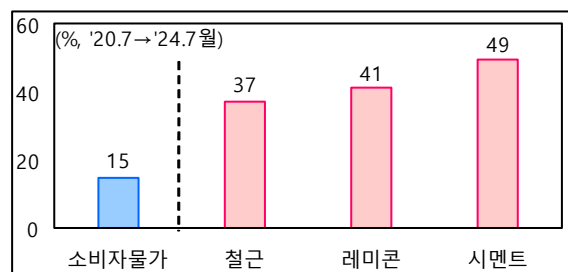
*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(천호): ('22.1)6.6 ('23.1)6.3 ('24.1)9.1 (8)13.6

* 건설수주(전년비, % '23.上→下→'24.上): (지방)△13.4→△18.5→△18.0 (수도권)△32.0→△8.6→26.4<서울 57.8>

건설수주 및 건설기성



주요 건설자재 가격 상승률



⇒ **공공투자 확대, 공사비 등 민간애로 해소, 미분양 축소 등 지역건설 여건 개선을 통해 건설부진 적극 보완**

3. 민간소비

□ 아직 회복세는 더딘 모습이나, 소비여력 개선으로 점차 회복 예상

- 민간소비는 최근 3개월 연속 증가한 서비스 소비부터 회복 조짐이나, 재화 소비(소매판매)를 중심으로 아직 회복이 더딘 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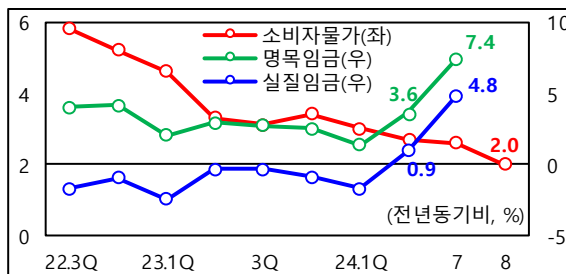
* 서비스업 생산(전기비, %): ('24.1Q)0.8 (2Q)△0.3 [(4)0.8 (5)△0.8 (6)0.3] (7~8)0.3
 소매판매(전기비, %): ('24.1Q)△0.5 (2Q)△0.8 [(4)△0.6 (5)△0.2 (6)0.9] (7~8)△0.6

- 고물가·고금리 완화, 수출호조·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가계 실질소득·임금 증가* 등에 힘입어 점차 개선 전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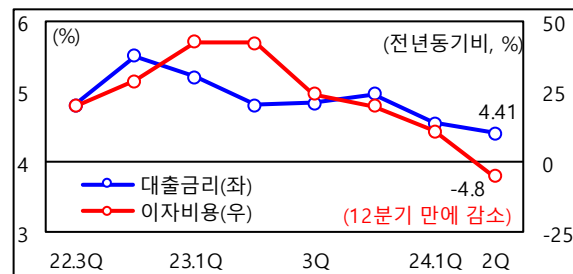
* (물가) 8월 2.0% / (가계이자비용) 12분기 만에 감소 / (실질임금) 2분기 들어 9분기 만에 상승 전환, 7월에는 명목임금 상승(+7.4%), 물가 둔화로 통계작성 <'12년> 이래 7월 중 최고치(+4.8%)

** 민간소비(전년동기비, %): ('23.上)3.1 (下)0.5 ('24.上)1.0 → ('24.下^e) <한은>1.8 <KDI>2.0

소비자물가 및 실질임금



가계대출금리 및 이자비용



□ 다만, 구조적 요인이 부문별로 작용하며 회복강도 제약

- 지방인구 유출·고령화, 고령층 소비성향 하락 등 구조적 요인이 지방소비 회복 제약

*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(%), '24.8월 기준: (수도권)17.4 (광역시)20.1 (도)23.1

소비성향('12→'23년, %, 한은): (60세 이상)75.0→67.1 < (전체)74.7→70.7

* '24.上 대형마트 등 대형소매점 매출액('20.上=100): (수도권)137 (광역시)132 (도)117

- 온라인화 가속, 코로나 기간 부채누적 등으로 소상공인 어려움

* '24.上 온라인/오프라인 매출액('20.上=100): (온라인)140.0 > (오프라인)113.7

- 코로나 당시 급증했던 내구재 소비의 교체주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가운데, 최근 전기차 캐즘 등으로 회복 지연

* '24.上 품목별 소비(전년비, %): (내구재)△6.3 (준내구재)△1.2 (비내구재)0.1 (서비스)1.4

⇒ 민간소비의 구조적 취약부문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추진

II. 대응방향

내수 각 부문별 진단을 토대로 맞춤형 회복 지원



Ⅲ. 세부 추진과제

1. 투자 회복 가속화

1 투자실행 촉진

◇ 현장대기프로젝트 밀착관리, 규제개선 및 인센티브 보강, 투자 활성화 지원체계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실행 촉진

<핵심 목표>

◆ 최대 107조원 규모 현장대기프로젝트 및 투자계획 실행 지원

- ① 4분기 총 24.4조원 8개 현장대기프로젝트(1~2차 투자 활성화대책) 신속가동 지원
- ② 4분기 최대 20.6조원 규모의 62개 프로젝트 분쟁조정 지원
- ③ 하반기 62조원 규모 10대 제조업 설비투자계획 이행 관리

① [현장대기] 애로 해소 등을 통해 4분기 24.4조원 규모 가동지원

① (애로해소) 既 발표한 1·2차 투자대책 중 23.6조원 규모 5개 프로젝트는 착공을 위한 주요 사전절차를 4분기 내 완료

< '24.4분기 주요 프로젝트 지원사항 >

주요 프로젝트명	주요 내용
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 (1,000억원, '23~'26)	▪ 산단 내 화장품 기업 입주 허용을 위한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완료(~'24.10월)
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(2,800억원, '24~'27)	▪ 「지방재정법」상 중앙투자심사 조기완료(~'24.12월) * 수시투자심사 제도 활용하여 3개월 → 40일 이내로 단축
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 (20조원, '25~'41)	▪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확정완료('24.9월) → 매립면허 등 협의 추진(~'24.12월)

* 셀프스토리지 기반 조성(0.1조원, '23~'30): 도심지 내 설치·운영 위한 건축법시행령 개정(~'24)
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(3.1조원, '18~'26): 기업전용 전력회선 설치(~'24)

② (밀착지원) 既 제기된 애로가 해소된 0.8조원 규모 3개 기업·지역프로젝트*는 4분기 차질없는 착공 위해 밀착관리** 지속

* 단양 체류형 관광시설(1,100억원, 지역펀드 선정/환경영향평가 완료), 구미 산단 근로자 임대주택(1,200억원, 지역펀드 선정), 부산 에코델타시티 생산시설(5,400억원, 개별냉방시설 설치 허가 완료)

** 범부처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(차관급)를 통해 현장애로 청취, 투자자금, 규제개선 등 지원

② [분쟁조정] 4분기 내 최대 62개 프로젝트(20.6조원) 조정안 도출

- 2차 PF조정위원회('24.6월~)를 통해 최대 62건(20.6조원 규모) 민·관 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(안)*을 4분기 내 도출 추진

* 예)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(0.8조원): 고금리 등 감안 잔금일·착공기한 연장
천안 아산배방 개발사업(0.9조원): 생활숙박시설→오피스텔로 용도변경

※ PF조정위 법적근거, PF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「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」 제정 추진
→ 「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여·야 공동발의('24.9.11)

③ [제도개선] 투자친화적 환경 조성 위해 규제개선·인센티브 강화

- ① (규제개선) 업계가 애로를 겪고 있는 확일적 제재처분과 과도한 신고의무* 등을 4분기 중 개선 완료

* ①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위반시 책임 면제

②안전문제 경미한 해체공사 허가·신고 면제 ③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 4년 연장(~'28)

- 업계 건의를 적극 검토하여 기업규모별·신산업 규제를 합리화 하고 경제형별 정비 지속 추진(11월중 주요 정비과제 발표)

- ② (인센티브)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, 「지역균형투자 촉진법」(기회특구) 제정 등 입법노력 병행

- ③ (인프라) 전력 적기공급을 위한 「전력망특별법」 제정도 함께 노력

☞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정책지원체계 대폭 확대·가동 추진

- ①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 창설을 통해 분야별 투자 활성화 대책 지속 마련, 관계장관 합동 경제 협단체·기업 간담회 통해 업계 투자독려·소통강화 추진

* 관계장관 합동 경제6단체 간담회 既시행(9.24)

- ② 확대 투자익스프레스(기재부 1차관, 관계부처 차관) 출범을 통해 핵심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해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(규제개선, 인프라·자금지원 등) 모색

- ③ 하반기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62조원 등 투자이행 적극 뒷받침을 위해 투자애로접수센터(대한상의), 실물경제지원팀(산업부) 중심으로 규제개선 등 밀착지원

※ 11월중 「3차 투자활성화 대책」 발표 예정

◇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·벤처기업 부담경감·자금지원 확대

① [중소] 임투 연장,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

- ① (세제)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은 항구화하고,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년 추가 연장(∼'25년) 조특법 개정

< 시설투자 세액공제율(%), □ '25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) >

구 분	당기분(기본공제)			증가분(추가공제)
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
일 반	1	5 → 7	10 → 12	+ 3 → 10 4 → 10
신성장·원천기술	3	6 → 8	12 → 14	
국가전략기술	15	15	25	

- ② (정책금융) 정책금융* 융자·보증 규모를 하반기 계획** 대비 +27.9조원 확대 집행하고, 이 중 중소·중견기업 전용으로 +16.8조원 투입

* 산은, 기은, 신보, 수은, 중진공, 무보, 지신보, 기보 ** 606.9조원 / 중소·중견전용 351.4조원 (하경정)

② [벤처] 글로벌 투자 및 국내 투자 확충 통해 벤처 활성화

- ① (글로벌) 2억불 규모 글로벌 벤처투자 모펀드를 설립*하고 해외 벤처캐피탈(VC) 등의 국내투자 촉진**

* 싱가포르에 ^{가칭}K-VCC 설립(2억불, '26~'27) → 중동, 美, 英 등에 추가 설립 검토

** 글로벌 펀드를 '27년까지 15조원 조성, 국내VC 대상 글로벌 출자사업 신설

- ② (국내) 벤처·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*를 도입하고, 정책목적 펀드에 대한 은행 위험가중치를 하향 적용**

* 일반국민도 상장시장을 통해 거래가능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추진(자본시장법 개정)

** 정부·지자체 출자 벤처펀드 등 요건 충족 시 위험가중치 하향 적용(400→100%)

-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기금으로 출자하는 ^{가칭}상생협력 벤처 모펀드'를 조성하고 벤처투자가 처음인 기관에 인센티브* 제공

* 연기금, 금융사 등 참여시 우선순실충당풋옵션 등을 부여하는 'LP 첫걸음 펀드'('25년 0.1조원) 신설

- 지역전용펀드를 대폭 확대('25~'27, 1조원)하고, 1억불 규모의 '글로벌 세컨더리 펀드' 조성 등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*

* 모태펀드 자펀드의 구주매입 한시적 인정(최대 20%), 대기업 편입시 매각의무 폐지 등

2. 건설부문 적극 보강

1 공공투자 확대

◇ 수주부진에 따른 하방압력을 공공 추가투자과 민자 활성화로 보완

① [공공] 하반기 총 8조원 추가투자과 함께 부진한 주택부문 보강

- ① (공공기관 투자) 既 발표된 하반기 공공기관 +7조원 추가투자*에 더해 인프라 투자 확대 등 +1조원을 추가 보강

* [하반기 경제정책방향(7.3)] +2조원 / [추석민생대책(8.28)] +5조원(당겨집행, 매입임대 등)

- ② (주택부문 보강) 신축매입임대 등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특례 지원을 강화하고, 역대 최대 공공주택 공급('25년 25.2만호) 추진

- 11만호('24~'25년) 신축매입임대 조기공급을 위해 약정체결기간 단축*(7→4개월 이하) 시 금년 중 선금 지급률 인상** 인센티브 확대

* 신축매입 총괄 전담조직 신설, 수시접수 전환 등 통해 3개월 단축(7→4개월)

** 선금지급률: (현행) 약정 체결시 토지 확보비용의 70% 선금지급 → (개선) 80%

- ③ (선금금 지급확대)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 공사계약의 선금금 지급한도 확대(최대 100%) 한시특례를 연장('24.下 → '25.上)

② [민자] 현안해결 및 제도혁신을 통해 민간투자 +30조원 확대

- ① (현안 해결) 보증공급 확대(24→4조원), 특별인프라펀드*(0.2조원) 신설 등 24조원 민간자금 유입 지원하고 공사비 변동위험의 합리적 분담 추진

* 민자사업의 출자지분에만 투자하는 사모펀드(산은 0.1조원 + 신보 0.1조원 + 민간 α)

- ② (제도 혁신) 민자사업으로 '운영 중'인 노후·혼잡 인프라 개량·증설 허용, 신규 사업시설 발굴을 위한 '패스트트랙'* 신설

* (현행) 각 사업별로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 → (개선) 일괄 상정·심의

◇ 공사비 안정화, PF정상화 지원 등 핵심 민간애로 해소

① [공사비 안정] **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** 통해 건설 비용부담 경감

<핵심 목표>

◆ '25~'26년간 공사비 상승률을 **최근 3년 평균(8.5%)보다 현저히 낮은 2% 내외로 관리**하여 중장기적으로 **장기추세선('00~'20년 年 4% 내외) 안착 유도**

① (자재비 안정화) 주요자재 수급·가격 안정화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*하고 공급확대 기반을 조성**

* 범부처 건설업 불법·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, 자재별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

** 민간의 해외시멘트 수입 추진시 애로해소 지원 및 품질 검증, 바다산지 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 등

② (인력수급 안정화) 고령화되고 있는 건설업에 신규인력 진입*을 촉진하고, 기존 외국인력 효율적 활용**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

* 건설기능인 채용 인센티브 마련, 청년 제대군인의 건설업계 성장경로 지원 등

** 외국인의 건설현장간 이동을 탄력적으로 허용, 외국인력의 업무범위 명확화 등

③ (공공조달 개선) 공공공사의 품질개선과 적기 자재조달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방식을 개선*하고 불공정행위 제재를 강화

* (현행) 시공사-발주처-조달청-공급업체의 복잡한 조달체계 → (개선) 중요 국가시책사업은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'25~'27년간 허용

② [적정 공사비] 공공·민자 **공사비 합리화**를 통해 유찰·중단 방지

① (공공) 공공사업 적정 공사비 반영 위한 제도개선안* 연내 확정

* ①일반관리비 요율 조정, ②총사업비 물가지수 적용방식 합리화, ③낙찰율 적정성 평가, ④터키공사 물가보정 시점 조정, ⑤공사비 보정기준 보완

② (민자) 민자사업 추진시 '21~'22년 공사비 상승 부담을 반영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사업참여 및 공사재개 촉진

* ①수익형 민자사업: 총사업비의 최대 4.4% 이내 금액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특례 마련

②임대형 민자사업: 일부 물가변동분 미반영 사업에 대해 미반영분 최대 50% 반영하는 특례 마련

③사업시행자 자재비 변동위험 헤지 의무 신설, 이를 위한 금융상품 가입비용을 총사업비 반영

③ [PF 등 자금지원] 총 100조원 유동성 패키지의 차질없는 가동 추진

- ① (사업장) 본PF, 준공전 미분양 등 각종 보증*을 44조원 공급하고, PF정상화 펀드(2.8조원) 통해 부실우려 사업장 재구조화를 지원

* PF보증(HUG·HF) 35조원,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(HUG) 5조원, 非주택 보증(건설공제조합) 4조원

- ② (건설사)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건설사 대출·보증(4.6조원), P-CBO에 건설사 편입(1.3조원), 책임준공보증(6조원) 추진

- ③ (시장 안정) 채권·단기자금 시장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도 유지하되, 향후 시장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

④ [정비사업 촉진] 절차단축·초기 자금지원 등 통해 사업 가속화

- ① (사전절차 단축) 기본계획-정비계획 동시 추진*, 사업 절차 개선** 등 절차 단축과 규제 완화를 통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

* 「재건축·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안 기발의('24.9.2)

** ①통합심의 및 인허가 의제대상 확대 ②총회시 전자의결 방식 허용 등

-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상한 기준에서 추가 허용*

* 규제지역 및 8.8일 이전에 사업계획인가 신청한 사업장은 제외

** 역세권 정비사업: (현행) 법적상한의 1.2배 → (개선) 1.3배 추가허용
일반 정비사업: (현행) 법적상한 → (개선) 1.1배 추가허용

- ② (자금지원)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용자 사업 신설('25년 20개소, 400억원)

⑤ [부담 경감] 세금·부담금 등 제반비용 경감으로 사업부담 완화

- ① (세부담 경감) 주택 건설용 토지 출자·취득 관련 세부담 경감

- 공모리츠에 토지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검토 조특법 개정

-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연장 ('24년말 → '27년말) 조특법 개정

- ② (부담금 경감) 비용부담 경감을 통한 사업촉진 유도를 위해 개발 부담금 감면, 재건축부담금·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 입법 노력 지속

* 개발이익환수법(9.24 발의), 재건축이익환수법(6.5 발의), 학교용지부담금법(7.29 발의) 개정

◇ 지역건설 위축의 주요 요인인 미분양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

① [주체별] 지방 미분양 신속 해소를 위한 **우대조치** 시행

① (사업자)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취득·보유 부담 완화

-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을 5→7년으로 한시 확대 ('25~'26년) 중부세법 시행규칙 개정
-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(85㎡ 이하, 3억원 이하)*를 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 최대 50% 감면 지특법 개정

* '24.1~'25.12월 준공된 '25.12월까지 임대계약(2년 이상)을 체결한 주택

② (구입자) 미분양 주택 보유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

-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(85㎡ 이하)에 대해 매입형 등록 임대 허용 <현재 非아파트에만 매입형 등록임대를 허용 중> 민간임대주택법 개정
- 지방 준공후 미분양(85㎡·6억원 이하) 구입시* 해당 주택은 중부·양도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및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

* '24.1.10~'25.12.31까지 최초 구입한 경우

-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* 취득후 5년 이상 임대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%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조특법 개정

* '24.8.28~'25.12.31일까지 취득한 주택(85㎡, 6억원 이하) 대상

② [CR리츠] 기업구조조정리츠의 **지방 미분양 매입 활성화** 지원

① (부담완화) CR리츠가 지방 미분양('24.3.28~'25.12.31 취득분) 매입시 취득세 중과배제(세율 12→1~3%) 및 중부세 합산배제(취득 후 5년)

② (보증확대) 준공후 미분양 매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CR리츠 대상 HUG 모기지 보증한도* 한시 확대 (~'25년말)

* HUG 모기지 보증한도: (現) 감정평가금액 × 60% → (改) 감정평가금액 × 70%

3. 민간소비 맞춤형 지원

1 지방의 소비기반 확충

◇ 각종 소비촉진 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전환, 가을축제 계기 지역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지방 소비기반 확충

① (비수도권 소비지원)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중심 개편

○ 전국 단위의 소비촉진 지원 프로그램을 비수도권에 대한 우대 지원으로 재설계 추진

* 금년부터 숙박쿠폰 및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비수도권에 한해 지원중

② (지역소비 불입) 지역방문 확대 등 통해 지역 소비활력 제고

① (할인 확대) '여행가는 가을' 특별 여행상품(5천명) 등 여행상품·숙박·교통 등 최대 58만명 대상 할인혜택 제공

- 추석 계기 확대 공급 중인 비수도권 대상 숙박쿠폰(20→50만장), 근로자 휴가지원프로그램(15→20만명) 지속 시행
- '디지털관광주민증' 소지자에게는 인구감소지역(34개 지역)의 숙박·체험·관람 등 할인혜택을 확대*하여 방문 촉진

* 51개 숙박업소 할인(2천명, 1만원), 23개 지역행 열차요금 할인(최대 50%) 등

여 행 상 품

- ▶ '여행가는 가을' 상품 20% 할인쿠폰(한도 5만원, 10.3주~11월 판매), 5천명 지원
- ▶ '나만의 여행' 열차·숙박·렌터카·입장권 등 40~50% 할인
- ▶ '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' 24개 소도시 교통·식사·입장권 통합 3만원 판매
- ▶ '웰촌 농촌여행' 최대 50% 할인
- ▶ 관광벤처기업 여행상품 17개사 참여

숙 박

- ▶ 비수도권 숙박쿠폰 50만장(8.27~11.17일 판매)
- ▶ 품질인증 숙박업소 3천명 지원(10월 판매)

교통·관광지 할인

- ▶ 관광열차 5개 노선 50% 할인(10.15~11.30일 판매), 3만명 지원
- ▶ 내일로패스 1만원 할인(10.25~11.30일 판매), 3.3만명 지원
- ▶ 농촌투어패스 최대 기차 50%, 버스 30% 할인
- ▶ 우수웰니스관광지 체험비 최대 3만원 할인, 4천명 지원
- ▶ 대구간송미술관 개관 전시 입장권 시티투어 이용객 20% 할인 등(9.3~10.31일 판매)

* 단, 할인혜택 일정 및 규모 등은 협약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

② (체류 확산) 지역 행사·축제를 통합 브랜딩·대형화하고, 징검다리 연휴 등 활용하여 지역 체류여행 확산

< 통합·연계 지역 행사 >

구분	행사 개요	주요 혜택
대한민국은 공연 중 ※ 최초 개최	▶(지역) 전국 ▶(일시) 10.4~11.10일 ▶(주요내용) 서울아트마켓 웰컴대학로 등 연계 장르별 대표공연 개최 및 전국 주요공연 140편 통합 홍보	▶공연장 입장권 30~40% 할인 ▶철도여행상품 공연 최대 2만원 할인
페스티벌 시월 ※ 최초 개최	▶(지역) 부산 전역 ▶(일시) 10.1~10.8일 ▶(주요내용) 부산국제영화제, 국제록페스티벌 등 17개 행사	▶통합입장권 도입 ▶호텔 연계 숙박패키지 판매 ▶비짓부산패스 결합
G-페스타 광주 ※ 최초 개최	▶(지역) 광주 전역 ▶(일시) 9.25~10.6일, 10.12~10.26일 ▶(주요내용) 광주비엔날레, 광주김치축제 등 2개 시즌 17개 행사	▶호남권 관광문화주간(광역 숙박쿠폰 발행) ▶미식주간 운영 ▶무등산 정상 개방 1주년 기념, 무등산 등산 챌린지 프로모션
판타지아 대구페스타	▶(지역) 대구 전역 ▶(일시) 10.4~10.13일 ▶(주요내용) 대구국제오페라축제, 월드오케 스트라페스티벌 등 13개 행사	▶간송미술관 연계 시티투어 운영, 입장권 20% 할인(~10.31일)
동서화합 문화예술관광 박람회	▶(지역·일시) 대구(10.4~6일) 광주(10.22~24일) ▶(주요내용) 영남 문화로투어, 호남 교류 투어 등 2개 행사	▶숙박·식사·체험·기념품 제공 투어 지원 ▶대구-광주 여행상품 지원금 제공

- 국군의 날(10.1일)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역관광·소비를 촉진

③ (생활인구 확충) “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” 등 방문·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의 연내 국회통과 추진

※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(24경정, 추석민생대책)

<①세컨드홈 활성화>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, 1주택자로 간주(재산세·종부세·양도세 완화)

<②소규모 관광단지> 관광단지 지정기준을 완화(50만㎡이상→5~30만㎡), 지정권한을 기초지자체 이양(시도지사→시·군·구청장), 지정조건 유연화(단일 부지→분리 부지 가능)

<③외국인 유입 및 농어촌 활력 증진>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→ 기주진(非입법)

④ (지역소비 유인) 전통시장 소비 소득공제율 상향(40→80%), 추가소비소득공제 상향(10→20%) 등 입법노력 지속^{조특법 개정}

- 9월 동행축제를 10월 초 징검다리 연휴기간을 맞아 지역 내수 진작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10월초까지 연장

2

취약부문 맞춤형 지원

◇ 저소득층 소득보강, 소상공인 채무조정, 내구재 구매촉진 등 부문별 어려움에 따라 가장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추진

① [저소득층 등] '25년 재정지원 4조원 확대, 맞춤형 금융지원 보강

※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예산 '24년 42조원 → '25년(안) 46조원

① (저소득층) '25년 연간 생계급여 141만원 인상 등 소득보강 강화

* 연평균 인상액: ['17~'22년] +47만원 → ['23~'25년] +166만원(3배 이상)

② (노인·장애인 등) '25년 노인일자리 ^{역대 최대} 110만개 공급, 장애인 고용장려금 12만명 확대 등 맞춤형 선별지원 강화

③ (임금채불자) '25년 체불 대지급금 및 체불청산용자 대상을 2만명 확대

④ (금융취약층) 금융애로를 겪는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완화*하고, 한계 서민·자영업자에 대해 선제적·과감한 채무조정** 지원

* ①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 확대(실직·폐업→영세소상공인) ②햇살론뱅크 장기 분할상환(최장10년) 전환 등

**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신설(1년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 100% 감면) 등

▪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을 청년 개인사업자로 확대*하고,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초저금리(2%대, 햇살론유스) 대출 지원

* (현행)저소득 대학생·미취업·사회초년생 → (개선)청년 개인사업자로 확대

⑤ (농어민) 누적된 고물가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위축과 농어민 어려움을 감안해 청탁금지법령 상 농수산물 가액범위를 상시 30만원으로 규정*

* (현행)평시 15만원, 명절 30만원 → (개정)상시 30만원

② [소상공인 등] 25조원 규모 경영여건별 맞춤형 지원 등 추진

【가. 소상공인·자영업자 종합지원】

① (금융비용) 지역신보 전환보증(7.31), 저금리 대환대출(8.13), 상환기간 연장(8.16)* 및 새출발기금** 통한 채무조정 확대(9.12) 순차 시행

* (금융지원 3종세트) 9.25일 기준 약 2.1만건, 총 5,097억원 지원

** 채무조정 대상·기간 확대 등 규모 확대(30→40조원+α) 및 취업·재창업 연계 지원 강화

② (폐업비용) 당초 예상보다 집행률이 높은 폐업지원 사업을 기금운용계획 변경(10월초, 약 130억원)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

③ (인건비) 현장의 유연한 인력 활용을 위해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 허가(E-9)의 가능한 업무범위*를 명확히 해 10월 신청접수부터 시행

* (현재) 현장에서 "주방보조원"을 설거지, 식재료 준비 등 업무만 가능한 것으로 인식 → (개선) 설거지, 식재료 준비 외에도 음식그릇 나르기 등 일부 홀에서의 업무도 가능함 안내

- ④ (배달플랫폼) 배달플랫폼-입점업체 **상생협의체**(7.23 출범)에서 수수료 등 부담 완화방안을 논의, **10월 중 상생방안 도출**
 *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주 부담 배달·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추진('25년 예산안)

【나. 위메프·티몬 사태 피해지원】

- ① (피해기업) 지원 대상을 **알렛츠 피해기업까지 확대***(10.4)하고, 위메프·티몬 미정산 피해기업 대상 자금지원 차질없이 추진
 * (8.7)위메프·티몬 → (9.9)인터파크쇼핑·AK물 추가 → (10.4)알렛츠 피해기업 추가
- ② (소비자 등) 일반상품·상품권 등 **413억원 환불완료**(9.25), 임금채불액 지급(채불기업) 및 채불피해자 대상 대지급금 지급*
 * 7·8월 채불액 19억원 지급완료(9.24), 임금채권기금으로 대지급금 379명·27억원 지급(9.27)

【다.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】

- ① (발행 지속) 온누리상품권을 차질없이 발행하고, **동행축제**(8.28~10.6, 12월중) 등 소비촉진행사 기간에 **상품권 이용 활성화 추진**
 * 연도별 발행목표(조원): ('21)3.15 ('22)3.5 ('23)4.0 ('24)5.0 ('25)5.5
- ② (가맹률 제고) 카드형(신용카드) 상품권 수수료율을 인하*('25.1~)하고,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한업종을 축소(40→29종, 9.10~)
 * 카드형 상품권 수수료율: (현행) 0.5~1.5% → (개선) 0.25~1.25%(체크카드 수준)
- ③ (사용처 확대) **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원기관***을 통해 후보 상권발굴 및 지정신청을 유도하고 **신규 지정 인센티브** 제공**(^{'23}182→^{'24목표}300개)
 * 전국 3개 권역별로 후보지 발굴 → 신청절차 안내대리 → 정책지원 안내까지 원스톱지원
 ** 신규 골목형상점가에 대해 전통시장지원사업 등 참여시 가점 부여
- ④ (사용 촉진) 온누리상품권 기업 인센티브*를 통해 구매 촉진
 * ①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(24년 이후 지출분)을 위한 「조특법」 개정안(9.13 발의)
 ②동반성장지수 개편시('24.12월) 온누리상품권 구매지표 확대 추진 (동반위)

3 [내구재: 자동차] “4+1 구매지원 패키지”를 통해 구매 촉진

- ① 자동차 구매부담 완화를 위한 **4종 구매지원 패키지** 차질없이 추진
- ①업계할인 비례 보조금 대상을 전기화물차(기존: 승용차 限)로 '24년 한시 확대
 ②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감면(70%) 추진 ③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특례 연장(~'26) 추진
 ④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기준 완화(3→2자녀, '25~) 추진
- ② 수요가 위축된 전기차의 경우, **안전관리대책***('24.9)을 조속히 이행하는 한편, **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****(('24.11~)
- *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('24.10), 기업 책임보험 가입 확대 등
 ** (현행) 국고보조금 10% 추가 지급 → (개선) ^{2자녀}100만원, ^{3자녀}200만원, ^{4자녀}300만원 정액 지급

◇ 먹거리 체감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, 구조적 대응 병행

① [먹거리] 비축물량 방출, 할당관세, 할인 등 먹거리 가격 안정 총력

① (공급 확대)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할당 관세 적용 등을 통해 안정적 수급관리에 역점

- 특히, 배추는 가을배추 정부 가용물량 조기출하(6천톤) 및 수입 확대*(4.1천톤) 등을 통해 추가 공급량 1만톤 이상 최대한 확보

* aT 직수입 1.1천톤 + 수입업체 운송비 지원 통한 민간수입 확대 유도 3천톤

- 배추·무·당근* 및 수입과일 전품목**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

* (배추·무) 10월말 → 연말 / (당근) 9월말 → 연말(잠정 10월말부터 재개)

** 바나나, 파인애플, 아보카도, 망고, 망고스틴, 자몽, 체리, 키위, 두리안, 만다린 등 10종

② (할인 지원) 한우·한돈 소비촉진 행사를 연말까지 지속 개최 (최대 50% 할인)하고,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 추진(11.20~30일, 코세페 연계)

③ (부담 경감) 식품 가공원료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(37종*), 중소 식품·외식기업의 구매자금 지원 확대

* 계란가공품, 냉동과일, 코코아매스·버터·파우더, 오렌지·커피농축액, 전지분유 등

② [구조] 유통구조 개선, 기후위기 대비 등 구조적 대응 강화

① (온라인·스마트化) 농수산물 유통비용 경감을 위해 온라인 도매 시장 내 공동구매·예약거래 시스템 구축('24.12월)

- '26년까지 스마트 APC를 100개소 구축('23년 14개소, '24년 30개소)하고, 도매시장內 경쟁 활성화* 추진

* 기존 도매법인 지정취소 및 신규 도매법인 진입 제도화('24년 중 농안법 개정 추진)

② (기후위기 대응) 중장기 농·수산물 수급안정대책 연내 마련('24.12월)

- 주요 품목별 수요·공급 분석 및 생산 전망 등을 기반으로 계약재배 확대, 비축 능력 개선 등을 통한 맞춤형 대응 추진

* (배추) 계약재배 확대, 비축시설 현대화, 출하장려금 지급 등